

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626-01

적극 행정  
법 제  
가이드라인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LAW

지방자치단체용

지방자치단체용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 라인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01. 적극적 법령해석은 무엇인가요? ..... 10

1.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금지합니다
2.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합니다
3. 국민의 편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확대 해석합니다
4. 국민의 안전 보장을 지향합니다
5.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합니다
6.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행정을 구현합니다
7. 행정편의적 해석을 지양합니다

### 02. 신산업 자율 보장은 어떻게 하나요? ..... 20

1.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등을 활용합니다
2. 신산업 자율보장을 위해 지원합니다

**03. 조례로 규정 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22**

1. 포상금
2. 보조금
3. 시스템 구축
4. 관계기관 협조
5. 자문위원회
6. 행정지도 또는 권고
7. 행정상 · 재정상 필요조치
8. 수수료
9. 우수 사례의 보급 · 확산
10. 그 밖에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04.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사항은 무엇인가요? ..... 25**

1. 부처공통
2. 감사 · 징계 등 관계 기관
3. 법제처



**부록 ..... 27**

- 법제처 적극행정 지원체계
- 법령해석을 통한 적극행정 사례





# 적극 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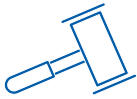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법령이 국가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 패러다임을 재설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일하는 봉사자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법치행정의 기반 아래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적극행정 법제’는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개정 절차의 장기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법령이 제때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시대의 변화와 상반되는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어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는 세부사항까지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 복잡화와 행정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예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사항도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등 법률 과잉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의 발전 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는 등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해졌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유권해석,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지원합니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자치법규(조례, 규칙 포함)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서입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 방법’, ‘조례로 규정 가능한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이 소관 법령업무 처리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특히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해당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적극행정 법제 실천 흐름도



## 적극적 법령해석은 무엇인가요?



적극적 법령해석은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시대의 변화,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문장의 상대성, 문언의 의미에 국한할 경우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논리해석\*\*을 적극 활용한 해석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확대해석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신산업 관련 분야 등 기존 법령에서 예상되지 않았던 분야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가급적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적극적 법령해석은 1차적으로 법령 집행 행정기관에서 하되 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등 법령에 대하여 **정부의 통일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 문리해석 : 법령의 문자·용어나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

\*\* 논리해석 : 법령의 문자·용어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이치·논리를 도입하여 해석

## 1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금지합니다

### 해석방향

규제는 문언대로 엄격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적 가치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합니다. 즉 유추해석, 확대해석 등을 통한 규제의 확대 적용을 금지합니다.

### 세부기준

적용대상이 규제 범위 내에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정의 규정이나 사전적 의미 등을 활용하여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적용대상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적 가치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한다면 축소해석하여 규제적용을 배제합니다.



### 사례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공장용지에 설립된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는 취소사유가 아닌 것으로 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문언을 엄격해석하여 문언의 범위를 넘는 사항은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 사례

- 규제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으로 규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회사는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금지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

## 2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합니다

### 해석방향

신기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 세부기준

적용하려는 사항이 법령 제·개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면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를 확인합니다. 규제 관련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상 적용하려는 대상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사례

-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

「의료법」 제23조 등 관련



신기술 등의 활용이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 의무기록을 보관하는 경우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누출·변조 금지 조치를 전제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AI medical SW)를 클라우드에서 제공시 클라우드를 허용 가능한 ‘의료기관 외의 장소’로 인정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료의 저장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료의 저장 가능한 장소를 물리적인 장소 외의 장소로까지 확대 해석

### 3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확대 해석합니다

#### 해석방향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해석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넓게 해석합니다.

#### 세부기준

입법취지가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이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확대해석을 고려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되는지 확인하여 제3자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다면 확대해석이 가능합니다.



#### 사례


- 의상자들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연휴양림등 입장료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국립 자연휴양림의 입장료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령(A)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B)에 따른 특정 대상자를 특례 대상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법령(B)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특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확대 해석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직접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등 관련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 법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대 해석

## 4 국민의 안전 보장을 지향합니다

### 해석방향

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을 통하여 최대한 안전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석합니다.

### 세부기준

안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넓게 해석합니다. 안전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행정 업무 수행 권한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 사례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봄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관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행정 업무 수행의 권한 범위 적극적 해석



## 사례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급경사지의 소유자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안전성 확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사용제한·금지 등의 안전조치명령만으로는 붕괴위험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관리기관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 ✎ 안전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그 범위를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넓게 해석

## 5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합니다

### 해석방향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 세부기준

법령이 사회적 약자 보호규정이라면 최대한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고 사회정의와 공평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석합니다.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 형태, 자격이나 학위 취득 경로 등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해석합니다.



## 사례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등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최대한 사회적 약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대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되었던 경력 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에 파견되어 근로한 경력도 인정되는 것으로 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별표 2 제1호 등



자격요건이나 인력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다양한 형태의 자격·근로 경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

## 6 절차 간소화로 신속행정을 구현합니다

### 해석방향

실체적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의 경우 과도한 절차가 되지 않도록 지나친 엄격해석을 금지합니다.

### 세부기준

특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이행할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한 방법으로만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정한 수준으로 절차나 요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확인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 사례


-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 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관리전환을 위한 절차를 거쳤으나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해당 규정에서 사용된 가운데점(“·”)의 의미를 불용품의 처분 방식을 예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 관련

 법령 문언에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불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신속 절차를 진행을 위하여 그 중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해석

## 7 행정편의적 해석을 지양합니다

### 해석방향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행정편의보다는 국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합니다.

### 세부기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엄격해석을 지양합니다. 특정 행위나 서류의 확인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사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제1호나목 등 관련



특정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입증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규제 내용이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범위를 국민들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 신산업 자율 보장은 어떻게 하나요?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규제 비적용 결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산업 자율 보장입니다. 이는 **적용 법령이 없거나 있더라도 새로운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애매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입법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에서 규제의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함으로써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방법** : 신기술의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시장출시를 위한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진행결과를 검토하여 필요 시 사후규제

》 **입법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 「산업융합 촉진법」(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

신산업 자율 보장을 통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기술 · 신산업**’ 분야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 제 · 개정 전에 **신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자유롭고 안정적인 영업수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마련**될 것입니다.

## 1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등을 활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전담기구 신설, 신산업 분야 감사자제 등 적극행정 면책방안을 2018년 2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 사례

- 공장부지가 40년 전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양분됨에 따라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용도지역변경(주거→준공업)이 가능한지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컨설팅(180억 신규투자 및 100여명 고용창출)

## 2 신산업 자율보장을 위해 지원합니다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의 해석·집행 시 선도 신산업에 해당 법령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거나 그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해당 신산업이 기존 법령의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법령해석 시 선도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수렴

## 조례로 규정 가능한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적극행정 법제는 **헌법상 근거가 있는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세부 사항까지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법률 과잉현상을 보완**합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조례로 규정 가능한 주요 사례를 살펴볼까요?

#### 포상금

행정에 도움을 주는 인센티브로 주는 포상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상위법령에서 직접 포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부당수급한 자에 대한 반환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규정 적용

## 보조금

반드시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구축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중인 단순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와 무관하므로 조례나 규칙으로 가능합니다.

## 관계기관 협조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임의적 협조 요청은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나 규칙으로 가능합니다.

## 자문위원회

절차가 임의적이고 결정 또는 판단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함.

## 행정지도 또는 권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고,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 · 절차 등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행정상·재정상 필요조치

확인적 규정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등가적 부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나 해당 상위 법령에서 직접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우수 사례의 보급·확산

행정주체의 책무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전담기관의 지정, 증명서의 재발급, 단순 행사개최, 의무가 아닌 교육훈련, 청문, 유효기간 만료의 통지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거나 집행적 사항인 경우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적극행정 법제는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행정 법제를 저해하는 **공직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려면 **관련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분야별 협조 사항을 살펴볼까요

#### 부서 공통

적극행정 법제의 확산을 위한 조직 분위기 쇄신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비조치의견제도 마련 및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등의 활용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합니다.

## 감사·징계 등 관계 부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징계 또는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공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향후 책임질 것이 두려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 가이드라인 및 인사혁신처 사례를 참고하여 면책기준을 현실화합니다.

\* (감사원)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시행 중

\*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징계면책 의무화 시행 중(2018. 5. 30.)

## 법제처

정부 유권해석,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 교육, 법령해석을 통한 정착 및 우수사례를 확산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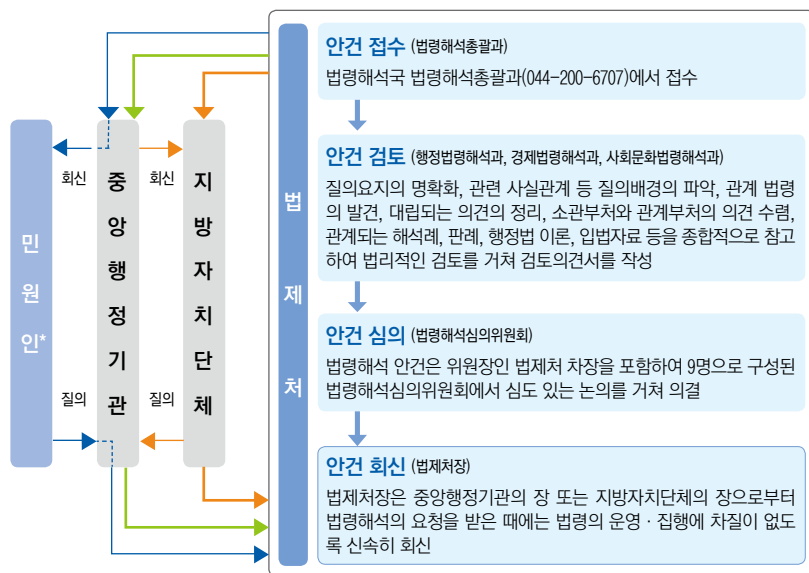
- 법제처 적극행정 지원체계
- 법령해석을 통한 적극행정 사례

# **법제처 적극행정 지원체계**

## **정부유권해석**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법제처가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 절차



\*질의/회신/민원인은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해석요청, 1개월 이내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요청

## 자치법제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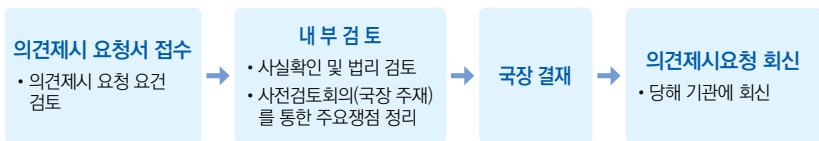
자치법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운영합니다.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이나 입법기술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집행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때에 법제처가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자치법규 해석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2012년부터 그 요청주체를 지방의회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 업무를 활성화합니다.

###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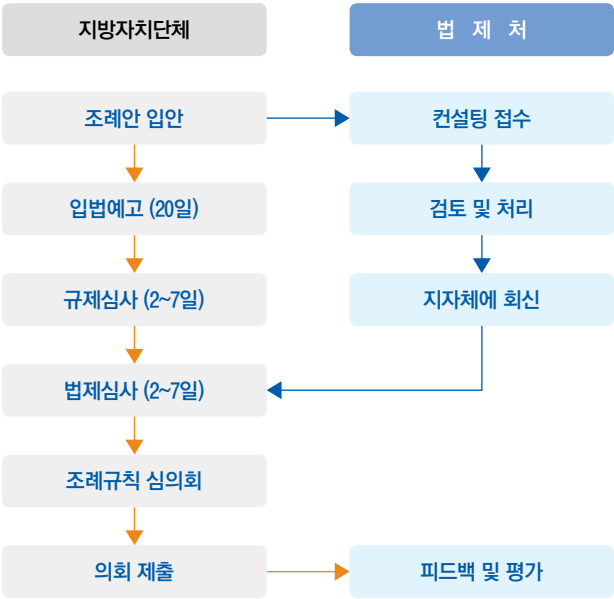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지방자치단체와 법제처 간 협업을 통하여 법령 위반 사항, 위법한 규제 등이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법제처는 조례안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검토의견을 제공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한정). 또한 지방자치단체 법제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법제처 검토의견을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심사합니다(자치입법권 존

중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법제부서에서는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 활용하도록 운영).

이 제도는 상위법령 위반 여부, 위임범위 이탈 여부, 신설되는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른 조례와의 충돌·모순 여부, 조문의 위치·순서 등 체계, 용어와 표현의 적절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그 밖에 적절한 부칙을 두었는지 등 종합 검토의견을 제공합니다.

절차



## 법령기획정비

법령정비는 각종 법령 속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중 법령기획정비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 관련되어 개선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정비 분야를 선정하여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동일·유사한 법적 문제를 한꺼번에 정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절차

<b>정비대상 과제의 기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판례·해석례 분석 등을 통한 자체 발굴</li> <li>- 국무회의 등에서의 기획정비 지시</li> <li>- 관계부처의 요청</li> </ul>
<b>정비대상 과제의 정비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전수조사 및 법령안 초안 마련</li> <li>- 법령안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협의</li> <li>- 정비대상 법령안 확정</li> <li>- 정부입법절차 이행(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 규제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국회제출 등)</li> </ul> <p>* 각 절차의 주관부처는 정비대상 과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제처(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와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결정</p>



## 법령기획정비 사례

국무조정실 및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실시했습니다('18. 5. 28. 공포).

\*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18.5.28. 공포)

연번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건인 대행업자의 주차시설 주차대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는 40대, 시·군은 20대	건인 대행업자의 주차시설 주차대수 기준을 특별시· 광역시는 30대, 시·군은 15대로 기준 완화	영업입지 규 제완화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별표 1의2)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의 무비율은 정해진 바 없음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 기관의 국내산 목재 및 목 재제품 우선구매 의무비 율을 정함	기업어로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5조)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 는 목재제품 개념을 한정 적으로 열거(제2조), 기업 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 (제45조)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 는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 적으로 정의(제2조), 기업 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 제조업까지 확 대(제45조)	포괄적 개념정의(제2 조) 유연한 분류체계(제 45조)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현행 옥외광고물의 분류를 벽면이용간판, 현수막 등 16종으로 제한(제3조)	현수막 등 16종으로만 분 류하던 옥외광고물에 새 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분류체 계를 유연하게 함(제3조)	유연한 분류체계

연번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밤, 잣 등 79개 종 으로 한정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 록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분류를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6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인터넷, 서면, 전자우편, 전화로만 획득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를 기존의 방법 외에도 문 자 메시지, 모바일 앱 등 새로운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연한 분류체계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총포·도검 등의 제조업 시 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	총포·도검 등의 제조업 시 설의 기준을 전용면적 80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영업입지 규제완화
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대기오염 측정방법을 오염 물질별로 한 가지 방법으 로 제한	측정방법 제한을 없애 반 도체 방식, 광센서 방식 등 다양한 신기술 이용방법 이용 가능	네거티브 리스트



## 법령해석을 통한 적극행정 사례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1.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 지양			
1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 37조 제1항제3호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건축한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18-015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타 인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유 에 해당하지만, 그 공장용지에 설립된 “공 장용도의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는 취소사 유가 아닌 것으로 봄
2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제3항	지방공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 자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가 건설업 등록 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 하는지 여부(17-0672)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 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 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 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3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을 반드시 상근 인력으 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16- 0134)	교관의 확보방법에 대해 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교관을 반드시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등 상근 인 력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 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 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받 기 위해 예치하거나 소유해야 하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 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 원 부지 비율의 총족 방법(16- 0680)	법령에서 민간공원추진자가 둘 이상인 경 우 반드시 그 중 1명이 단독으로 현금을 예 치하거나 부지를 소유할 것 등과 같이 그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현금 예치 또는 부지 소유를 어떻게 분담할 것 인지는 민간공원추진자들 간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봄
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 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 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이 완화되는지 여부(16-0052)	입주자대표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에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가 없었던 경우 해당 규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
6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 식으로 매입한 산업단지 소재 국유 토지에 공장 등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18-0236)	법령에서는 국유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 업체가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 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대”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 으나 그와 성격이 유사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더 큰 “매각”의 경우에도 해당 규 정이 적용된다고 봄
7	구 경관법 (법률 제12013호) 부칙 제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 의에 관한 적용례의 규율대상 에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 없 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 계용역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 되는지 여부(18-0054)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 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제를 강 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 적용례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재설계용역” 을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안정성 및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강화 된 규제가 해당 사안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8	사립학교법 제28조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16-0371)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은 경영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자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려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증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II. 국민의 편의 증진

9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18-0010)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고 둘째, 셋째 쌍둥이 자녀를 양육한 육아휴직기간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봄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수익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사업이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17-0358)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재단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학자금대출 원리금 면제사업이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11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 제2호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의무보 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 당하는지 여부(17-0027)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권 자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직접적 이해관 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 를 입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
1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 하 각급 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18- 0364)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
13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업보호구역에 태 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15-0414)	법령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주체 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 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외의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태 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봄
1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 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 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 (18-0001)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 하여 연계노령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 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 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연금가입 기간에 다수의 직역재직기간 합산이 가능 하도록 봄
15	의상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상자 등이 국립 자연휴양 림을 이용할 경우 국가는 의 상자 등의 입장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17-0258)	의상자 등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연휴양림등 입장료 면제 대 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상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국립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봄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b>Ⅲ. 국민의 안전 확보</b>			
1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 사지에 대한 정비사업의 실시 가능 여부(17-038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급경사지 의 소유자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안전성 확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필요한 조 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사용제한·금 지 등의 안전조치 명령만으로는 붕괴위험 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관리기관이 정비사 업을 시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 로 봄
17	수상레저 안전법 제25조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 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7-036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 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 공백 발생 방 지를 위하여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 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 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고 봄
<b>Ⅳ.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b>			
18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고등학교 등 교원의 초임호봉 을 확정할 때 “대학”과 “전문 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 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17-0518)	전문대학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중등교 육 이후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 학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로서, 교원의 호봉 확정 시 전문대학도 대학 과 같은 수준의 학교로 봄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19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 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 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 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 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임대료 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 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17-0665)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임차인의 주 거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 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 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 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 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 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 를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봄
2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재외 국민 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 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할 허가할 수 있 는지 여부(17-0260)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 등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문대 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학위 심화과정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 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로 입 학할 수 있는 것으로 봄
2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 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 하는 인력인 “전담인력”에 단 시간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 부(16-0473)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제외한 업무 의 수행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이가 없 으므로 단시간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동 등하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전담 하여 수행하는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전문 인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
22	저작권법 제33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 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15-0733)	법령에서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 의 시설로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 일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학생지 원센터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습 또는 복리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시각 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2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별표 2 제1호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 는지 여부(18-0159)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대해 청소년단체에 직접 고용되었던 경력 뿐 아 니라 청소년단체에 파견되어 근로한 경력 도 인정되는 것으로 봄

#### V.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행정 구현

24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3항제4호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 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 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 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8-0100)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 괄하는 기관으로서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해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 을 단속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를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 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봄
25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등 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 재할 수 있는지 여부(17-0513)	법령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제원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해당 시·도지사 등이 공고한 내용을 제3 자가 다른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 은 해당 시·도지사 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 더라도 시·도지사 등이 각각 공고한 내용 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 재할 수 있다고 봄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26	자동차 관리법 제12조제1항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18-0161)	자동차 상속에 관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
27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와 매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여부(15-0050)	「물품관리법」에서는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해 처분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관리전환을 위한 절차를 거쳤으나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해당 규정에서 사용된 가운데점(·)의 의미를 불용품의 처분 방식을 예시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봄
28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17-0102)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VI. 행정편의적 해석 지양			
29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18-0056)	법령의 본칙 규정과 서식 규정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제1호 나목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18-0026)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봄
31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7조 제2항 제2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여부(17-0680)	기존 공업지역의 해제와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해제 및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 행정절차상 약간의 시차라도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지정이 불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지역 운용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연번	법령	질의요지	해석 내용
Ⅶ.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32	의료법 제23조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 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17-0700)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

지방자치단체용

적극 행정  
법 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법제처

발행일      2018. 12

홈페이지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디자인·인쇄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지방자치단체용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www.moleg.go.kr](http://www.moleg.go.kr)